

# 보다 냉철한 인식과 보다 담대한 상상력으로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하는 운동을<sup>1)</sup>

「새로운 주체와 실천에 대하여」에 답변

---

이정인 | 사회주의노동자신문

필자가 「탈공업화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글에서 제기한 주장들을 거칠게 요약하면 전통적인 공업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비중과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비제조업·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새로운 노동자층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이야말로 19세 중반에 사회이슈로 등장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개념에 더욱 가까운 계층이라는 것, 반면 조직노동운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대공장과 공공부문의 정규직노동자들은 그 속에서 점차 특권화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주의자들은 중공주의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 제조업 중심

---

1) 이 글은 김혜진 동지의 「새로운 주체와 실천에 대하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씌어져 작년 12월 사노신이 발행하는 격월간 매체 <focus>에 이미 게재된 글임을 밝힌다.

주의에 빠져 있었으며 이것은 비제조업·서비스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노동자들을 정치적 주체로 세워내는 활동에 인식적인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김혜진 동지는 이 글에 대한 논평과 논점을 제시했는데, 제기된 논점들 중 몇 가지는 매우 일반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현재의 조직노동자를 과연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볼 수 있는가?

김혜진 동지는 토론문에서 서유럽에서 식민지 수탈과 노동자대투쟁의 결과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노동자들과 한국의 대공장노동자들의 상태를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대공장과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신중간계급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에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아마 김혜진 동지 뿐 아니라 노동운동 활동가들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간계급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자의 문제의식을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 조직노동운동의 주축을 이루는 금속대공장과 공공부문의 정규직노동자들을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맑스에게 계급이 우선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규정되는 관계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에 따르면 부르주아 사회에서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생산수단을 박탈당하고 자본에게 자신의 육체, 즉 노동력을 파는 대가로 얻는 임금을 유일한 소득으로 삼는 계급이 늘어난다. 자본을 소유하고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트를 고용하여 잉여가치를 수취하

는 사회계급이 부르주아이며, 소규모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자기 자신의 노동이나 혹은 소수 사람들의 고용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에 존재하는데, 맑스는 대표적으로 이전 사회의 유제인 소자영농과 도시의 장인 및 자영업자를 그 예로 들었다. 하지만 맑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대공업이 발전할수록 경쟁에 밀려 이들이 점차 도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맑스는 이미 1860년대에 전통적인 삐띠부르주아가 아니라 임금소득을 받는 다른 형태의 중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그는 『잉여가치 학설사』에서 군인, 하급관리, 변호사, 의사, 학자, 교사 등 임금을 받긴 하지만 프롤레타리아라고 볼 수는 없는 중간계급들의 증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 달리 계급이라기보다는 이질적인 중간계층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봤으며 이들의 증가가 계급의 양극화 경향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임금을 받는다는 여부만 가지고 계급을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맑스는 1848년에 쓴 〈철학의 빈곤〉에서 경제적 조건에 의한 이해의 동일성로부터 공동의 행동이 나타나고 이로부터 공동의 의식, 즉 계급의식이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대공업은 서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한 장소에 집결시킨다. 경쟁이 이해관계에 따라 그들을 갈라놓는다. 그러나 임금의 유지라는, 고용주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이해가 그들을 저항, 곧 단결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일한 사상으로 결집시킨다. 그리하여 단결은 항상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지양하고 그럼으로써 자본가들에 대해 전체로서 경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중의 목적을 가진다. 저항의 최초의 목적이 단지 임금의 유지였을 뿐이라 해도 자본가 쪽이 억압이라는 하나의 사상으로 결집함에 따라 처음에는 고립되어 있던 단결이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끊임없이 결합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에게는 연합의 유지가 임금의 유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된다. … 일단 전투의 시기에 이르면 연합은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 경제적 조건들은 먼저 그 나라의 대중을 노동자로 바꾸어 놓았다. 자본의 지배는 이 대중에게 하나의 공동의 지위,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 주었다. 이리하여 이 대중은 자본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의 계급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지 않다. 우리가 단지 그 몇몇 구건들만을 지적했던 투쟁 속에서 이 대중은 결합하고 자신을 대자적 계급으로 구성한다. 대중이 옹호하는 이해는 계급의 이해가 된다. 그런데 계급 대 계급의 투쟁은 정치투쟁이다. (맑스, 『철학의 빈곤』, ME선집 1권, p.295)

따라서 맑스에게 계급이란 개념은 생산관계 속에서 위치 뿐 아니라 공동의 투쟁을 통해 공동의 의식과 자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회집단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운동이 대자적인 계급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후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맑스에게 깊은 인상을 준 초기 노동운동은 영국의 차티즘 운동과 1848년 2월의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정치투쟁의 주체로 나타났다. 영국노동자들은 보통선거제를 요구했으며 프랑스노동자들은 노동의 권리와 사회적 공화국을 요구했다. 그러나 차티즘 운동과 2월 혁명의 패배 이후 유럽에서 노동자운동은 오랫동안 침체에 빠졌다.

유럽에서 대중적인 노동운동은 19세기 후반 유럽 전역으로 대공업의 확대되면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이 시기부터 대규모 공장에서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산업투쟁과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투쟁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는 외자유치로 대공업이 도입된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이를 일상적인 노자관계에서 스스로를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이중적 존재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그 관계 “외부로부터”

정치의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경제주의 발흥의 배경이 된 산업호황이 1900년경 마감되고 사회위기와 불안이 증대되면서 경제주의는 몰락했고 1905년 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다른 유럽 산업 국가들에서 노동자들의 보수화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국수주의 열풍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유럽 노동운동에 매우 실망한 레닌은 1880년대 엥겔스가 영국 노동운동의 보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귀족화된 노동자” 즉 노동귀족 개념을 가져 와서 이 현상을 유럽의 주요 산업국가 전반의 것으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그 기초를 제국주의 세계분할과 식민지에 대한 초과착취로 설명했다.

여러 산업분야들 가운데 한 분야,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의 자본가들은 높은 독점이익을 획득함으로써 개별적인 노동자 계층들을, 다수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개별 노동자 계층들을 일시적으로 매수하고 그들을 모든 나머지 노동자들에 반대하여 특정한 부문들 또는 특정한 나라들의 부르주아지 편으로 넘어오게 할 수 있는 경제적 가능성을 얻게 된다. 그리고 세계분할로 인한 제국주의적 민족들 사이의 심화된 적대감은 그런 경향을 강화한다. (레닌, 「제국주의」, p.160)

유럽 산업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확장은 식민지에서 산출되는 원료를 값싸게 유지하고 식민지를 공산품을 수출하는 시장으로 활용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식민지들이 정치적으로 해방을 맞았지만 서구의 산업독점과 옛 식민지에 대한 지배-종속관계는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주요 산업국가에서 1950년대와 60년대 이어진 장기호황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제 3세계 자원의 가격은 낮게 유지되었으며, 60년대 종속이론이 제 3세계 국가들에서 큰 각광을 받

은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기성장과 함께 산업국가에서 대공업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자 부르주아 사회학에서 전통적인 노동계급의 중산층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노동자들의 보수화는 서구 맑스주의 진영에서 이른바 “맑스주의 철학”의 변성으로 반영되었다. 루카치 이래로 서구 맑스주의자들은 계급의식을 강조하는 편향을 보였는데, 그것은 노동자라는 객관적 조건과 계급의식의 분리라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것으로 전도되게 된다. 서구의 좌익운동 일부가 테러리즘으로 극단화된 것은 우연만은 아니다. 마오주의에 경도된 유럽의 극좌파들은 제 3세계를 혁명의 중심으로 놓기도 했다.

이른바 진보·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노동귀족이라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며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공격이라고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엥겔스나 레닌의 정의에 따르면 북미와 서유럽, 그리고 최근 한국의 대공업노동자들은 노동귀족이 분명하다. 엥겔스는 영국의 대공업노동자들에 대해 겨우 15년간의 지속적인 노동조건 상승을 가지고 노동귀족이라고 말했다. 서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대공장 노동자들만 해도 구조조정 시기의 일시적인 후퇴를 제외하면 87년 이후 30년 가까이 노동조건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레닌은 자본주의 발전이 기회주의를 강화시키며 가장 좋은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이 기회주의로 기울어지는 것이라면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는 절망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활동가들에게 그런 태도는 기회주의를 은폐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물론 엥겔스나 레닌은 노동귀족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상태라고 보았다. 따라서 논점은 김혜진 동지의 지적대로 이들이 다시 투쟁으로 생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까지는 주요 산업 국가들에서도 조직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이 주기적으로 터져 나왔다. 68년 혁명을 전후한 시기 유럽 노동자들의 투쟁 뿐 아니라, 노동당 정권을 퇴진시킨 영국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이 1974년에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대공업·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은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무언가 본질적인 변화가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1970년대의 경제위기는 알다시피 중동 산유국들의 가격담합에 의한 유가상승으로 촉발되었다. 석유파동은 우연적인 돌발사건이 아니라 산업 국가들에 의한 자원의 지배체제가 균열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2차 대전 이후 옛 식민지 국가들의 정치적 해방은 냉전이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종속관계를 점차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5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동회의는 정치적으로 해방된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국가들이 모여 탈식민지화를 앞당기고 이를 보편화할 것을 천명했다. 1956년 이집트 나세르 정권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켰고, 1958년에는 알제리 전쟁이 벌어졌다. 1960년대 들어 제 3세계 국가들의 해방투쟁의 더욱 격화되었다. 석유파동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의 결과였다.

급격한 유가상승은 서구 산업 국가들이 비서구 국가들에게 초과착취한 부의 상당량을 제 3세계 국가들로 돌려주는 결과를 낳았다. 유가상승으로 인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GDP의 거의 5%가 중동 산유국으로 이전되었으며, 중동의 신흥부국들은 그 돈으로 주변의 노동자들을

수입했다. 비단 산유국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주노동자들의 국내송금으로 많은 가난한 나라들에 자본이 유입되었다. 금태환 조치를 철회한 미국이 마구 찍어낸 달러화는 증등으로 흘러 들어가 오일달러로 불리는 거대한 화폐자본의 집적을 형성했고, 이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토대가 되었다.

유럽과 북미는 80년대 들어서 전반적인 산업재편과 구조조정의 시대로 들어갔다. 그 결과 유럽과 북미에서 중간층은 해체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하락과 고용불안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노동운동의 투쟁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경제위기와 사회불안에도 유럽·북미의 노동자 투쟁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는다. 김혜진 동지는 대공장과 공기업노동자들도 “불안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불안 때문에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맑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간층의 처지 역시 언제나 불안하다. 단지 프롤레타리아트의 불안이 생존자체의 불안함이라면 중간계급화된 조직노동자들의 불안함은 기득권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산업 국가들에서 이러 불안은 투쟁이 아니라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존 권리를 지키는 대신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용인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귀결했던 것이다.

이미 낱알이 확산되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대공업의 조직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 미국에서 디트로이트 자동차공장의 정규직노동자가 받는 연봉은 월마트 노동자들의 세 배가 넘는 6만 달러 정도 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주로 대도시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보통의 노동자들의 월임금은 150만 원에

서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한데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은 그 서너 배가 넘는다. 그들은 장시간노동을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시대에 그 정도 임금을 받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노동을 특권으로 여길 것이 분명하다. 평균 임금을 훨씬 뛰어넘는 소득은 자산의 축적 가능성을 낳는다. 많은 정규직노동자들이 주식·펀드·부동산 등 자산축적에서 상당한 금융소득을 얻고 있으며, 퇴직 이후 자영업자로 변신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저임금·불안정 노동에게 그러한 자산 축적의 기회는 거의 박탈되어 있다.

##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변질

한국에서 대공장노동자들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집단적 세력으로 등장했다. 그 주축은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대투쟁 이후 80년대 말 3저 호황과 맞물려 대공장노동자들의 생활 조건은 급속히 향상되었고, 연대투쟁에 소홀한 경향이 나타났다. 때문에 90년대에도 대공장 노조운동의 보수화 문제는 많이 지적되었다. 90년대 후반 즈음해서 이러한 현실의 반영으로 노조관료론과 한국이 아(亞)제국주의라는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97년 노동법 개정과 98년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대공장노동자들, 특히 자동차산업의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저항에 나섰다. 세계적으로 이미 전통적인 노동계급의 투쟁이 보기 힘든 것이 되고 있던 당시 한국 노동자들이 보여준 전투성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1998~2000년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사회 어떤 계층으로부터 지지·지원을 받지 못한 채 조직노동운동의 패배로 끝났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십년 동안 시민운동의 제도화는 민주주의 운동과 조직 노동운동의 분리를 가져왔고, 조직노동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으며 노동유연화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노동유연화의 확대는 조직노동운동과 합의에 의해 제도적 기초를 마련했다.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같은 노동유연화 악법들이 민주노총 합법화·노조 정치참여·복수노조 도입·근로자참가제 등 조직노동의 이해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과 교환되었다. 이 시기 대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체결된 노사의 완전고용협약은 정규직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비정규직 확대를 용인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 들어 근로자참가제를 근거로 현장에 만들어진 일상적 합의구조는 비정규직 배제의 기초 위에서 형성되었다. 단협 체계를 부분적으로 대체한 대의원 중심의 현장합의 체제는 현장권력의 썩어 떨어질 것이라는 일부 정규직중심주의자들의 기대와 달리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라인재편·외주화 등 구조조정에서 정규직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비정규직의 해고를 용인하는 기능을 했다.

완성차 자본은 이러한 체제를 통해 정규직노조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공장 내외부의 저임금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통해 높은 이윤과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 속에서 정규직노조는 고용보장과 높은 임금의 대가로 공장 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만을 억누르고 그들의 투쟁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공장 내부의 재편은 당연히 사회적 재편 과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급속히 늘어나는 저임금·불안정노동자들의 배경으로 대공장 정규직운동은 고립된 그들만의 별세계가 되어갔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지만 2003년 이후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잠잠했다.

소위 노동·진보진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대공장 정규직운동이 여전히 모종의 생동성을 갖고 있으며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투쟁을 예로 든다. 그러나 99년 구조조정 분쇄투쟁과 쌍차, 한진 투쟁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구조조정 분쇄투쟁 당시에도 대공장 정규직운동은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배제했지만, 적어도 그 투쟁은 구조조정 공세에 맞선 전공장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한진·쌍차 투쟁은 정리해고에 맞선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해고자들의 명단이 확정될 때까지 투쟁은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결국 명단이 나오고 나서야 해고당사자들 중심의 싸움이 되었다. 같은 공장의 동료들이 그러할 진데 다른 대공장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금속노조 소속 대공장노조들은 눈도장 찍기 식의 형식적인 집회 참여 외에 이 투쟁들을 방관했고, 한진에서 나타난 것처럼 투쟁에 대한 연대는 오히려 노동운동 외부에서 형성되었다. 해고자들이 밀려난 현장은 어용노조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해고된 대공장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내몰려 거리에서 다른 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

최근 울산 대공장노동자들의 의식을 연구한 서울대 사회학과 유형근 씨의 「한국노동계급의 형성과 변형」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은 대공장 노동자들은 작업장 바깥에서는 이미 뚜렷한 중산층 지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장시간 노동이라는 조건으로 말미암아 작업장 내에서는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성은 작업장 내부에서도 하청을 비롯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배타적인 조합주의적인 정체성이며, 한국의 대공장 역시 점차 전반적인 제조업의 축소 흐름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제적인 추세를 뒤

갖고 있다. 최근 현대·기아자동차와 일부 1차 부품업체에 주간연속2교대제가 도입되었다. 90년대 이래 국제적으로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유연화의 확대와 함께 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주간연속2교대제 같은 작업장 수준의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003년경부터 제조업 사내하청에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지기 시작하자 현대·기아 자본은 주간연속2교대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불법성의 상징이자 하청노조로 조직되어 노동조건이 점차 높아지고 있던 1차 하청을 축소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착취체제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으로 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고용을 누리고 있던 1차 하청노동자들 상당수를 정규직화 시키는 대신 계약직·한시하청 등 더욱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새로운 비정규직 고용을 늘여나가려는 심산인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러일으키리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실제 별다른 투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임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정규직노동자들은 이미 그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정년까지 확실한 고용보장을 받아내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노동시간단축 덕분에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수입에 맞는 여가를 누리게 되면서 생활·의식의 중산층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간연속2교대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분할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대규모사업장 정규직노동자들의 계급으로부터 이탈은 정치·의식적으로도 자유주의로의 종속으로 나타난다.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노동자 후보가 두 명이나 나왔지만 대공장 밀집지역에서 이들에 대한 지지는 다른 지역의 평균지지율과 별 차이 없었다. 반면 민주당 지지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기업노조들의 민주당과 정책적 협력 관계는 더욱 밀접하다. 최근 서울본부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노동센터를 건립하는 일을 두고 벌어진 논란들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의 일환에 불과하다.

임금 관계가 일반화된 자본주의의 현 단계에서 계급은 객관적 위치에 의해서만 구분되지 않는다. 이해의 동질성, 소득 수준, 사회적 지위, 역사적 경험과 의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대규모사업장의 정규직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다수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들과 소득·생활조건·정체감·이해 등에서 이미 같은 계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계급이며 공동의 이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왔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이런 현실을 이미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인정하고 있지만 굳이 대공장노동자들을 프롤레타리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여전히 운동의 중심에 있는 대공장운동질서를 괜히 적으로 돌릴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자는 하나"라는 선협적 관념에서 나오는 단결론이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들의 이해를 정규직 이해에 종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속노조의 1사 1조직 논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1사 1조직을 앞세운 정규직노조의 이른바 “직가입” 공세에 의해 기아비정규직노조가 붕괴될 당시 대다수 운동진영의 태도는 방관이었다.

정규직노조로 하청노동자들의 직가입이 발전이라는 사고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기아비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의 지지·지원 호소는 정파적 이해로 왜곡되거나 폄하되었고, 심지어 직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운동단체나 활동가들도 있었다. 결국 고립과 압박에 버티지 못한 비정규직노조 지도부는 굴복하고 말았는데, 그 결과는 2·3차 하청업체 해고자와 윤주형 열사, 그리고 최근 KD 외주화 투쟁에서 현재의 하청분회가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 사내하청노동자와 새로운 주체

현실에 눈을 감은 “노동자는 하나”라는 관념이 대공장 하청노동자들의 주체화를 어떻게 실패로 이끌었는지 지난 십 년 동안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다.

김혜진 동지는 대공장 하청노조운동이 대공장운동과 비정규직운동의 교집합이라는 측면에 주목했다고 말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은 당시 비정규직운동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을 것이다. 당시 비정규직문제를 고민한 선도적 활동가들이 가졌던 우려 중 하나는 조직노동운동의 배제 속에 비정규직운동이 전투적인 노동운동보다는 정책·제도 중심의 시민사회운동으로 견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공장 하청운동은 보수화되는 정규직운동질서를 혁신하고 비정규직운동을 전통적인 전투적 노동자운동으로 끌어들이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2000년 봄부터 수도권에서 비제조업 부분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나 대개 중소영세사업장이던 이 투쟁들이 장기투쟁 끝에 노조조직마저 남기지 못하

고 유실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대공장 하청에서 비정규직문제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활동가들의 사고는 더욱 커졌다.

90년대 중반부터 대공장정규직으로 취업은 불가능했으므로 현장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은 대공장에 하청으로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 그전에는 대공장에 하청으로 취업한 활동가들 대부분은 하청노동자들의 조직보다는 현장조직 등 정규직운동질서에 개인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대공장에 하청으로 취업한, 대개 노동운동에 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급진정파에 적을 둔 활동가들은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조직한다는 목적의식으로 뚜렷하게 선회했다. 2003년 이후 모든 자동차사업장과 현대중공업에 하청노조를 건설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을 때, 이 운동의 주도자들은 대개 하청으로 공장에 취업해 있던 직업 활동가들이었다.

한국에서 처음 하청노조가 건설된 것은 99년 5월 목포의 한라중공업(현 삼호중공업)에서였다. 한라중공업사내하청노조(이하 ‘한라하청노조’)는 전국비정규직노동자모임(이하 ‘전국모임’) 소속 활동가들이 현장에 취업하여 건설한 노조였다. 90년대 중반 들어 경제위기가 가중되면서 아시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이 몇 건 벌어졌는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취업해 있던 하청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이 전국모임이었다. 이 조직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내건 한국 최초의 운동단체였으며, 2002년 해산 이후에도 여기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은 금속대공장에서 벌어진 거의 모든 하청노조 건설투쟁에 참여해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한라하청노조가 건설되기 전, 전국모임 내부에서 벌어진 하청운동의 전망에 관한 논쟁은 몇몇 사람들 내에서의 매우 제한된 논쟁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후 하청운동의 전망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립성·이동성·분산성을 근거로 지역노조, 혹은 비정규직일반노조를 전망으로 제기했고, 다른 쪽에서는 원청 자본의 이름을 정확하게 걸고 대자본에 맞선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하청제도를 철폐하는 전투적 투쟁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쟁은 후자의 승리로 끝나 99년 한라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노조는 목포·영암지역비정규직노조가 아니라 한라중공업사내하청노조라는 이름으로 건설되었다.

한라하청노조는 복수노조 규정 때문에 공장을 지역으로 하여 공장 내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노조 형식으로 설립필증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후 건설된 캐리어하청노조, INP중공업 하청노조를 비롯하여 현중·현대·기아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하청노동자들의 노조는 모두 한라하청노조의 규약을 기초로 건설되었다. 따라서 한라하청노조는 사실상 이후 사내하청노조의 모델로 기능했는데, 이는 선도적 활동가들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이후의 대중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한라하청노조로부터 시작된 하청노조운동은 처음부터 “비정규직철폐, 정규직화”, “원·하청 공동투쟁”, “원청사용자성 인정” 등을 목표로 내건 전투적 운동으로 출발했다. 당시만 해도 비정규직철폐와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노동유연화의 확대를 현장에서부터 막아내는 동일한 요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십여 년이 흐른 지금 하청운동이 내걸었던 요구들은 초기에 가졌던 급진성을 잃고 있다.

필자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김혜진 동지의 비판적인 문제의식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불법파견 판정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정

규직 전환이 현실적인 요구가 되면서 불법파견 정규직화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일반적 이해와 분리되고 완성차 공장에 제한된 조합적 요구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도 마찬가지다. 원청사용자성 인정이라는 문제는 다양한 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공동의 요구일 수 있는 것이었으나, 이 요구는 곧 원청과 교섭체결이라는 요구로 변형되어 원청과 교섭테이블을 만드는 것에 목을 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대부분의 자동차대공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가 건설된 2003년 이후, 대공장 하청운동과 다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운동이 빠르게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는 형태적으로는 대공장 하청노동자들이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적으로는 비정규직 법 투쟁 국면에서 대공장 하청노동자들의 소극적인 참여에서 나타났다.

원·하청 공동투쟁이라는 슬로건은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는 동일한 적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며, 대공장 현장사에서 정규직의 지원 없이 요구 쟁취가 힘들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대공장 하청운동을 주도한 활동가들은 현장 내 정규직이 투쟁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정규직의 태도 변화는 정규직운동질서의 계급성을 복원을 의미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정규직운동질서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이 부르짖은 원·하청 공동투쟁 요구는 그 조합주의를 폭로하고 저지하며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이해의 차이로 인해 애초부터 불가능한 소망이었음이 현실에서 검증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쟁취하자”고 외

치지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정규직운동질서가 조직적·집단적으로 자기 사안처럼 비정규직투쟁에 결합하는 아름다운 사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2003년 「노동자권력을 향한 전진」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던 그룹은 대공장 하청노조 건설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대공장으로 비정규직투쟁을 도입하는 것은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조합주의를 뛰어넘는 계급적 연대성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장 내 운동질서를 혁명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사회주의자들이 주축이 된 대공장 하청노조건설 투쟁을 통해 하청 활동가들과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전투적 정규직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더욱 계급적인 새로운 운동질서를 창출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주의적 공장세포를 건설해나가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비정규직노조 건설투쟁 과정에서 그런 정규직 활동가들은 공장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재편할 만한 세력으로 계급적인 정규직운동이 공장 내부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울산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그 오랜 시간동안 자기 투쟁처럼 그 투쟁에 연대하고 있는 정규직 활동가들이 한 손에 다 꼽힐 정도뿐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오히려 원·하청 공동투쟁이라는 슬로건은 정규직운동질서에 대한 의존성과 패배주의를 심화시켰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노조에서 뭐 하나 보태준 것이 없이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운동질서의 지원 없이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사고가 여전히 존재한다. 교섭력이 취약한 하청노조에게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정규직노조가 만든 원·하청연대회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정규직노조에 의해 실현된 원·하청 공동투쟁은 정규직 운동질서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을 강화시켰을 뿐이었다. 원·하청연대회의의 속박을 깨기 위해 일단 거기 들어가서 힘을 키워야 한다고들 생각했지만 정규직노조의 통제 속에서는 그런 힘이 조직되기 어렵다는 악순환에 빠졌다.

한 마디로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대공장 운동질서를 혁신한다는 전략은 실패했다. 정규직 운동질서의 벽을 넘을 수 없었으며,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무수한 활동가들이 대공장 하청운동에 피땀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내부에서 사회주의 의식을,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

물론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측이 이미 신규채용을 강행하고 있고, 쟁점이 조합원 우선 채용까지 물러나 있다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투쟁이 마무리되고 나서 대공장 비정규직운동이 어떤 전망을 가져야할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십여 년 동안 대공장에서 비정규직투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규직과의 연계를 갖고 공장 더 깊숙이 들어가려는 운동이었다. 이제 그 결말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으로 매듭이 지어지려는 듯하며, 그 뒤로는 아마도 대공장 내부에서 더 이상 어떤 변화의 계기를 찾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공장 내에서 더욱 단속적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고용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공장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존재하는 한 비정규직노조의 존재이유는 남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저임금·불안정노동자들은 아직 무정형의 대중으로 존재하고 있다. 반면 지난 십여 년의 투쟁 속에서 대공장 비정규직운동은 투쟁의 경험으로 단련된 활동가들을 상당수 배출했다. 정규직 운동질서와 기존의 관성에 연연하지 말고, 내부의 새로운 비정규직을 기초로 공장 외부의 저임금·불안정노동자들과 접점을 형성해나갈 수 있다면, 대공장 비정규직운동은 다시 한 번 새로운 운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 노조, 평의회, 당

필자가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용어가 새로운 노동자들의 일반성을 지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시각은 대개 비정규직·비전형적 일종의 부분적 이탈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을 볼 때, 자본주의 진행 경과에 따라 조직노동운동의 주력부대인 대규모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점차 줄어들며 계급의식에서 멀어지는 반면 이들이야말로 이제 다수 노동자들,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생활 조건에서 19세기적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트,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에 가장 부합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은 김혜진 동지의 지적대로 아직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불안정·비정규직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주변부에 매우 얇고 불안정하게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간 거의 모든 투쟁은 이 얇고 불안정한 조직들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의 투쟁들은 주류 운동의 방

관 속에서 대부분 기약 없는 장기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의미의 노조 운동의 한계를 시험하는 투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레닌이나 코민테른은 노동조합 속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대중을 “계통적”으로 획득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수 명에서 십 수 명이 수 백일에서 수 천일을 투쟁하는 장기투쟁 사업장의 현실에서 그런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본적으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운동은 노동조합운동=노동운동이라는 사고가 지배했다. 하지만 1830~40년대의 초기 노동운동에서는 생산협동조합운동이 노동조합 운동보다 훨씬 강력한 운동이었다. 김혜진 동지는 노동권을 보편적으로 확장하는 투쟁을 주요하게 제기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맥락으로 볼 때, 이 말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법·제도적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하시는 것 같다. 원래 “노동의 권리”라는 말은 1848년 혁명에서 노동자들이 내세웠던 대표적인 슬로건 중 하나였는데, 그것은 실업의 걱정 없이 일할 권리를 말하는 동시에 노동자 자신들이 자신의 일터를 경영할 권리를 거칠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말이었다. 대공업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전, 상대적으로 소규모 작업장에 분산적인 상태로 존재하던 초기의 프롤레타리아는 고용의 불안으로부터 오는 생존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협동조합을 만들어 작업장을 직접 운영하려고 시도했다. 최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붐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은 다수 노동자들의 존재조건이 19세기 전반처럼 불안정해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사노련/사노위에서 빚어졌던 공장을 기본으로 두느냐, 지역을 기본으로 두느냐는 하는 논란은 이미 낡고 관념적인 논쟁이다. 이직이 잦은 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고민하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이기 때문이다. 많은 운동단위들이 몇 년 전부터 지역중심의 사업계획을 내고 있으며, 김혜진 동지가 제기하는 지역공단조직화 사업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 있다. 필자는 지역공단에 대한 문제의식이 불안정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시작하는 주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용과 실업상태를 오가는 이들 노동자들의 현실을 볼 때 노동 의제 뿐 아니라 교육·문화를 포함, 생활에 보다 전방위적으로 밀착하는 형태의 운동이 고민될 필요기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역을 기존 노동운동의 연장으로만 사고할 때 자칫 다시 조합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도 상호부조적인 공동체 운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가 노동자들의 정당 건설과 함께 가야한다는 김혜진 동지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노조운동이 쇠퇴하고 있긴 하지만 노조를 대체할 대중조직이 등장하기는 어렵다. 노동조합은 여전히 노동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직이다. 평의회와 노조에 대해서 내 생각은 김혜진 동지와 비슷인데, 동지의 말처럼 평의회라는 형식보다 최근 투쟁사업장 노조들의 성격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평의회적인 운영원리를 도입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일상적인 시기에 노조를 평의회로 형식적으로 대체하려는 노선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힘들 것이다. 근래 재능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노조질서의 관성과 평의회적 성격 사이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기존 운동 내의 관성을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보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최근 국제적으로 평의회적인 운동은 1960년대 평조합원 운동처럼 노동운동 내에서가 아니라 스페인의 분노한 자들 투쟁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점거 투쟁에서 보여지듯이 미조직된 대중의 점거와 총회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라는 형식 내에서든 밖에서든 이런 평의회적 운동방식이 반짝 등장했다가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조/평의회의 대당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정치적 주체로 형성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고립성·분산성·이동성을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 조직화의 약점이라고들 한다. 조직화에 있어 공간적 밀집성이 커다란 이점이라는 점을 부정할 순 없다. 대공업의 등장과 함께 노조운동이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작업장의 규정력이 낮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것이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치투쟁과 산업투쟁의 분리를 극복할 가능성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 알바연대의 활동에서 단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정치적 의지를 가진 집단이 불안정·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해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캠페인을 통해서 조직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경제투쟁을 통한 우회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치 캠페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들을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작업장 운동으로부터 정치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정치운동으로부터 다시 작업장 운동으로 들어가는 방식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조직노동 중심의 이해에서 벗어

나 불안정·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해를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정당 혹은 정치세력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야말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올해 여름 진보신당에서 조직노동운동을 비판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해가 당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자, 당 내외부의 격렬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여전히 노조관료들이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노동정치 지형에서 그런 주장이 쉽게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한계는 현재 여러 정치적 재편흐름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변혁모임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 주체들 상당수가 노동운동 주변부로 내몰린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기조는 불분명하며 낡은 노동운동 전투파의 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제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김혜진 동지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이 다시 예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더욱 냉철한 인식과 보다 담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과 함께 그들의 이해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